

제1회

1. ③ 개발정책은 생산적 자본과 노동을 유입하는데 기여하나, 재분배정책은 생산적 자본과 노동을 유출시키고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유입하는데 기여하므로 지방정부는 재분배정책보다는 개발정책을 선호한다.
2.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·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주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주민투표로도 변경할 수 없다.
3. ② 임대주택 사업과 사회보장 및 통합의료보험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지원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.
4. ③ 정책승계란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정책 통합, 정책 분할, 정책대체, 부분대체, 우발적 승계 등을 포함한다.
5. ① ㉔, ㉕은 옳고, ㉖, ㉗은 옳지 않다.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는 인간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'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호(외생적 선호)'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. 따라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인간의 선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(㉖).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권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한다(㉗).
6. ③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<<오답정리>>

①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다만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.

② 부패혐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았을 경우 위원회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.

④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「공직자윤리법」이 아닌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」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.
7. ④ 민츠버그(Minzberg)는 조직의 각 부분 중 어느 부분의 힘이 강한지 여부에 따라 단순구조, 전문적 관료제, 사업부제, 기계적 관료제, 임시구조로 구분하였다.
8. ② 실적주의는 업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공직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적격자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.

9.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(PBS)는 지출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투입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가 용이하다.
10. ② ㉔, ㉕은 옳고, ㉖, ㉗은 옳지 않다. 공익실체설은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의 극대화(전제효용극대화가설)를 강조한다(㉖). 공익과정설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행정의 이익집단 간 조정자적 역할을 중시한다(㉗). 공익과정설은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(㉔). ㉔과 관련하여 플라톤(Plato)과 루소(Rousseau)는 기본권 등의 절대적 가치를 공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익실체설의 입장에 있다. 반면, 슈버트(Schubert)는 과정론적 공익관을 집대성한 학자이다.